

공 개



의안번호	제 6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1. 18. (제 1 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1. 17.

## 1. 의결주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4.1.19일 시행 예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①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비율 산정시 고려할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 등을 규정함

### ②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외에서 발생하였으나 위반행위의 직접적 동기·목적이 되는 이익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율하고,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이익은 예시임을 명시해 향후 다양한 유형의 이익을 포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③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기준 및 관련 서식 규정

성실험조, 새로운 증거 제공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함에 따라 성실험조 및 새로운 증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타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감면을 불인정함에 따라 강요에 대한 기준 제시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면제 기준을 규정

감면신청서를 신설하고 구두를 통한 감면신청도 허용

#### ④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 위반시 조치 개선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시위반 등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필요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합 의 : 1)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완료(규제 미포함)

2) 2024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24.1.10.) 심의필

3) 2024년도 제1차 안전검토소위원회(2024.1.11.) 심의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9.25.~11.6., 2023.12.7.~12.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별지 >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9조의3 제430조”를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로, “제377조 및 제379조”를 “제377조, 제379조 및 제388조의2”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단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별표 제3호 8.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8.라.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산정방

식은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 중 “법 제429조의2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단, 3. 바. (1). 단서의 경우는 제외).”를 “법 제429조의2의 경우,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단, 3. 바. (2). 단서 및 (3)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아.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별표 2 제3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를 (4)로 하고,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준금액은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2) 법 제429조의2제1항의 경우,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3) 법 제429조의2제4항의 경우,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표2 제4호가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5)(종전의 (4)) 중 "법 제429조의2의 경우"를 "법 제429조의2 제4항의 경우"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9조의2 제1항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200	100분의 150	100분의 125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별표2 제4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29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 <일반기준>

구분	중요도	상	중	하
법 제173조의2제2항	업무와 관련하여 장내파생상품 관련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74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74조제2항 및 제3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76조(다만 제2항제2·3호는 제외한다) <sup>주1)주4)</sup>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sup>주2)</sup>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 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위반 관련	위반 관련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sup>주3)</sup>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제176조제2항제2· 3호 및 제178조제1·2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법 제178조 의2 제1항 제1호	가 목	받은 자 (2차 수령자)	전득한 자 (3차 이상 수령자)	-
	나 목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직접 생산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	-
	다 목	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
	라 목	-	받은 자 (1차 수령자)	전득한 자 (2차 이상 수령자)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 <sup>주1)주4)</sup>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sup>주2)</sup>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허수호가 비중 1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이상 1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허수호가 비중 5%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sup>주3)</sup>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sup>주1)주4)</sup>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sup>주2)</sup>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 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종목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sup>주3)</sup>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주가변동률 25% 미만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단, 법 제178조의2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주가변동률 =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폭\* - 동일업종의 주가변동폭\*

\* 주가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주가(종가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4) 주가변동률 산정이 곤란한 ELW, ETN, ETF 등의 경우는 판단기준에서 주가변동률은 제외하고 적용

<법 제176조 각 항, 법 제178조 각 항 및 법 제178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파생의 경우>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76조(다 만 제2항제2·3 호는 제외한다) <sup>주1)</sup>	$\frac{\text{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text{주2)}}}{20\text{회 이상}}$	$\frac{\text{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10\text{회 이상 } 20\text{회 미만}}$	$\frac{\text{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10\text{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1% 이상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이상 1%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미만
법 제176조제2 항제2·3호 및 제178조제1 ·2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1호 <sup>주1)</sup>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10%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이상 10%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전체주문 대비 허수호가 비중 5% 미만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sup>주1)</sup>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2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이상 2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종목 일평균 1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1% 이상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이상 1% 미만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이 ‘상·상’ 또는 ‘상·중’인 경우는 ‘상’, ‘상·하’ 또는 ‘중·중’인 경우는 ‘중’, ‘중·하’ 또는 ‘하·하’인 경우는 ‘하’(단, 법 제178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



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별표2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li> <li>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li> <li><u>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u></li> <li><u>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u></li> <li><u>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u></li> <li>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li> <li>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li> </ul>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li> <li>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li> <li>&lt;삭제&gt;</li> <li>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li> </ul>

<삭제>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을 “법 제429조제4항 및 제42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429조의2”를 “법 제429조의2제4항”으로, “다만, 법 제429조의2”를 “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법 제429조의2”를 각각 “법 제42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8조의2제1항”을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및 법 제17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미공개중요정보”를 각각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정보”로 하고, 같은  
 목 중 “10억원”을 “10억원(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174조 위반행위 관련인 경우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미공개중요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미공  
 개정보”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2)부터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  
 4조 위반 관련)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 이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 이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D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3)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 이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나) 시세를 하락·방어한 경우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 이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4)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물 이야기	A	C	C
중 대	B	C	C
경 미	C	C	C

별표 3 제3호의 A 및 B의 조치기준란 후단 중 “또한,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을 “또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다만,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중 정보를 전달한 경우는 C(과징금) 또는 D(경고)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으로 하고, 같은 호 비교의 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기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④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⑤ 동일·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별표 제3호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8호) 라목 중 “있다”를 “있다.  
(다만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별표 제2-4호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제3호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미공개정보·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질적 행위자 또는 법인의 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과징금 감면기준(제33조제2항제1호 관련)

##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면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란 법 제173조의2,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나. ‘자진신고등’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였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 (2)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다. ‘자진신고등을 한 자’란 수사기관, 법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라. ‘조사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 (1) 수사기관·법원에서의 수사, 조사 및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
- (2)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조사, 심의·의결 및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

### 3.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가. 시행령 제37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종료 이전에 해당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알고 있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 (2)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하여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 (4)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조사 등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 (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379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 제한은 없다)로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한 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통신기록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내역, 그 밖에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2) 자진신고등을 한 자 또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한 다른 자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 진술서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 시행령 제379조의2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 (2)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 4. 감면신청

가. 법 제448조의2 및 시행령 제379조의2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에 제출할 수 있다.

- (1) 해당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번호 및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근무부서·연락처를 제출한다.
- (2) 해당 신청인이 관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개요
- (3)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 (4)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조사등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나. 시행령 제379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가.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 12-4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감면신청의 특례

가. 이 기준 4.가. 또는 나.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준 4.가.(1)부터 (4)까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기준 4.가.(1) 및 (2)의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상기 나.의 보정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사원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상기 다.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상기 나.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 시 기재하였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1) 당초 신고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 (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상기 다.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 6. 구두 감면신청

- 가. 신청인이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 기준 4. 또는 5.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상기 가.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원은 이 기준 4.가.(1)~(5)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7. 감면신청의 접수 등

- 가. 이 기준 4. 또는 5.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분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이 기준 6.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 12-3호 서식에 준하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개요와 접수일시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상기 가. 또는 나.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 (1)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 (2)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4) 이 기준 6.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시·분

다. 상기 가. 또는 나.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이관·이첩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감면신청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 8. 감면 여부의 결정

가. 조사원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등을 한 자 지위 인정결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 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금융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제출된 증거자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자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 지위 인정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및 사업장 주소재지를 말한다.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자진신고등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 9.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자진신고등

가. 시행령 제37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별로 1회에 한하며,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은 다시 시행령 제379조의2제2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기 가.에 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2)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보다 크게 2배 미만인 경우 : 3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3)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4)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음

다. 상기 나.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는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라. 상기 가. 및 나.에 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이 기준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상기 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자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0. 비밀 엄수의 의무 등

가. 조사원 등은 신청인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원을 금융위원회의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을 조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조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라. 금융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11. 다른 기준과의 관계

가. 법 제448조의2, 시행령 제379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의 5.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제379조의2 및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4]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1.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8조의2 및 별표20의2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 시행령 제388조의2 및 별표 20의2 제1호나목1), 2) 및 3)에 따른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에 해당하는 사례(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수수료, 인수대금, 운용보수 등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

2) 위반행위를 통해 파생상품, 공매도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가) 위반행위를 통해 계약조건 또는 연계되는 현물의 시세를 변동시킨 경우 :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손익과 실제 발생한 손익의 차이로 산정하고,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손익은 위반행위 개시일 전일의 다른 금융상품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을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

가) 실제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과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차이 × 합병법인의 상장 초일 시가총액

나)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전일 종가(시세를 상

승시키거나 하락을 유도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기간 중의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산한 지분율을 말한다.

4) 추가담보납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금융비용 절감액의 이익

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정상담보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한 금융비용 절감액

나) 위반행위 개시 후부터 위반행위 종료시점까지 기간 중 최저종가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을 정상담보비율로 본다.

5) 매수청구권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 방어하거나 하락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매수청구권 상승 또는 하락 방어,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가) 정상 매수청구권 가격과 실제 매수청구권 가격의 차액  $\times$  매수청구권 행사 수량

나) 정상 매수청구권 가격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전일 종가(시세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유도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기간의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시세하락을 방어한 경우)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산한 매수 청구권 가격을 말한다.

6)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유리한 합병가액 평가를 받는 경우

가) (실제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times$  합병법인의 상장 초일 시가총액

나)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은 분식이 제거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비율을 재산정하여 계산한다.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수수료, 채무면제 등의 이익

8) 그 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중에서 1)~7)과 유사한 구조의 거래는 1)~7)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3. 시행령 별표20의2제1호바목4)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위반행위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금융투자상품의 시세변동 가운데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10% 이상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외부요인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 외부요인에 따른 시세변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세변동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감면신청서(별표 제2-4호 4. 가.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등 자진신고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신청서						
신청인 (공동감면 신청시 별지 기재)	성명			주민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소속(직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미 공 개 중 요 정 보 이 용 행 위 등 의 개 요	※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대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대상이 된 증권·파생상품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상장법인의 ◇◇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였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기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시작한 시기, 지속된 기간,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참여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협의(합의, 공모, 모의 등의 유사한 유형을 포함한다)한 경우, 참여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협의 일시 및 장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협의 일시와 장소, 협의 횟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장소가 없다면 생략) 예) 2023년 10월 1일 서울시내 ○○○ 음식점				
	의사연락 및 협의의 방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취한 의사연락의 방법(예: 이메일, 전화, 팩스 등), 협의의 방법(예: ○○○회의체 구성, 정기적 모임 등)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증거자료 목록	<p>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p> <p>&lt;증거자료의 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협의한 합의서 등의 서면, 금융거래내역 등 합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li> <li>·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li> <li>· 위반행위자들 간의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전화 통화기록, 통신기록, 팩스기록,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li> <li>· 위반행위자들 간의 회합(합의, 공모 등을 포함한다) 입증할 수 있는 회의장소 사용기록, 신용카드 전표 등</li> <li>·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전후의 경영상태, 주가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내부문서, 보고서 등</li> </ul> <p>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p>					
보정기간	위 사항 중 일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과 협의 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에의 감면신청 여부	위원회에 감면신청하기 이전에 외국정부에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신청을 한 경우 감면신청한 외국의 관련당국 명칭과 신청한 일시를 적시하여 주십시오.					
신청 이후 주의사항	1.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					



## 추가감면 신청서(별표 제2-4호 4. 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추가감면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소속(직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당해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등 목록  (추가 감면대상)	본안 의결서 번호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력 감경 여부 (O/X)		자진신고등 일자 /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심의일 (2회이상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심의일)	최종 부과 과징금	관련 부당이득액
다른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등 목록  (추가 감면사유)	본안 의결서 번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유형		자진신고등 일자		관련 부당이득액	
신청 시 주의사항	<p>1.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의결 및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진신고등 신청서 또는 신청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함</p> <p>2. 본 신청서 제출 시점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및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모두를 기재하여야 함</p>						
<p>상기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의2제2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3조 및 별표 제2-4호 4. 나.의 추가감면을 받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6 조제5항 · 제8항, 제429조, 제4 29조의2, <u>제429조의3</u> 제430조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 376조, <u>제377조</u> 및 <u>제379조</u> 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라 한다) 또는 증권 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 · 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 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 “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 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 ----- <u>제429조의</u> <u>3, 제430조, 제442조의2</u> ----- ----- ----- <u>제377조, 제379조 및 제</u> <u>388조의2</u> ----- ----- ----- ----- ----- ----- -----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 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 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 ----- ----- ----- -----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③・④ (생략)

제33조(조치의 가중·감면 등) ①  
(생략)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 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8. 라.에 따

법 제

429조의 2제 4항

② 제1항 단서-----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조치의 가중·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8.라.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 “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u>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조사1국
연 락 처	02-2100-2682	02-3145-5582